

증액폭 싸고 기획원-국방부 실랑이

국방예산 관련 당정협의 안팎

방위예산과 관련해 23일 열린 당정협의는 별다른 성과없이 경제기획원과 국방부가 각자의 의견만을 내놓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져 국방비 증액폭을 둘러싼 정부·여당내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당초 기획원쪽의 증액폭 10.4%에 불만을 품고 불참을 통보했던 국방부가 여권 수뇌부의 설득으로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하긴 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협의를 주선한 민자당측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민자당은 기획원과 국방부간의 절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이승훈 부총리의 청와대 보고에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현재 국방부쪽의 완강한 태도로 봐 이 과정에서 기획원이 설정한 증액폭 10.4%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불만표시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비공개로 열린 협의에서 민자당측은 국방부의 전년대비 18% 증액요구에 대해 그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만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를 설득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민자당은 국방비를 18% 증가선으로 늘릴 경우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수밖에 없으며 대도시 교통난, 환경보전 등 당의 주요 역점사업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팽창예산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19.5% 증가예산을 편성했는데 증가분을 대부분

자당은 정동윤 제1정조실장을 관훈동 당사로 급히보내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의 우려를 전하며 의견조정상의 잠음방지를 당부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불참을 통고했던 국방부는 부처차원에서 국방예산의 항목별 사업내역을 적극 설명해 총량규모의 삭감을 막기로 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수정했다.

라면서 "병사 급식비 인상을 비롯한 복리비를 늘린 것은 사실이나 물가 및 임금인상이 방위산업물자 등의 조달가 인상으로 이어져 증액효과는 사실상 상쇄된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논리를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또 인상분 1조 1천9백억원 가운데 전력증강비 3천억원은 87년 서독에 발주한 잠수함과 92년부터 8년간의 '차세대전투기 구매와 공동생산계획'

이 나돌아 한때 바짝 긴장했으나, 민자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예산 심의에 응했다는 소식에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경제기획원은 방위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해마다 적지 않은 실랑이를 벌여왔지만, 올해처럼 당정협의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은 전에 없던 일이어서 이번 일이 자칫 의외의 '사태'로 번질까봐 애를 태웠던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쪽의 요구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제,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 여건상 국방부쪽의 얘기를 모두 다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국방부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

민자 지도부, 불참엄포 국방부 설득 애먹어 자기쪽 주장만 되풀이...끝내 합의점 못찾아

내달 4일 청와대 '낙점'에서 기획원 원안보다 높아질 가능성

국방비로 돌릴 경우 민자당은 '생색도 못 내고' 정치적 타격만 입게 된다는 계산도 이번 국방비를 둘러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자당은 22일 저녁 당 예산실무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국방부쪽을 설득,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현역 장성들도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민자당측은 이날 저녁 여러차례 전화로 접촉, "국방부의 입장이 타당하다면 회의에 나와서 의견을 정확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야 경제기획원이나 당에서도 가려운 곳을 알 것"이라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가 끝날 무렵 민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의 6조6천3백78억원에서 18%가 늘어난 7조8천3백억원으로 요구한 데 대해 "일반운영비 8천5백억원과 전력증강비 3천억원의 인상분이 계상된 것"이

의 추진에 따른 선금금 지급 등에 꼭 소요될 예산"이라며 "이의 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제기획원은 국방부가 당정협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국민들은 동서해방 무드로 주변정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며, 노 대통령의 남북 군비통제 논의 용의 표명 등에 따라 이것이 곧바로 방위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기획원은 이처럼 국방부쪽과 증액규모를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이면서도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인지 자체내의 의견이나 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극히 꺼리는 눈치인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방위예산만은 언급하기를 '자제'하고 있어서 방위비 조정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